

이슈브리프 896호
(2026. 9.16)

푸틴의 쿠릴열도 방문과 러일 갈등의 새로운 국면

제896호

김태주 tjkim@inss.re.kr



국문초록

푸틴 대통령의 쿠릴열도 방문과 뒤이은 대규모 군사훈련은 북방영토에 대한 러시아의 실효 지배를 재확인하는 것을 넘어, 미일동맹 강화와 일본의 방위력 증강에 대한 러시아의 전략적 경고라는 의미를 갖는다. 동시에 이번 방문은 러시아가 미국 및 일본과의 대화 필요성을 환기하고 동북아시아에서 미·일·러 간 전략적 상호작용을 촉진하려는 복합적인 의도를 내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중일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러일 관계까지 악화할 경우, 다카이치 내각은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외교·안보적 부담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북방영토 문제와 평화조약 협상의 교착, 대러 에너지 의존이라는 구조적 제약까지 고려하면 일본은 대러 강경정책과 관계 복원 사이에서 복합적인 전략적 딜레마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에도 새로운 전략적 기회를 제공한다. 한국은 한미일 안보협력을 토대로 해양 감시·정찰 및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동시에, 한일 간 에너지·첨단기술·공급망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이러한 기능적 협력을 한일 FTA와 경제통합 논의로 발전시켜 정치적 갈등에 취약한 한일 관계를 보다 지속 가능한 제도적 협력체제로 전환하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키워드: 푸틴, 쿠릴열도, 북방영토, 러일 관계, 다카이치 내각, 미일동맹, 한일 관계, 동북아 안보

푸틴 대통령의 지난 8월 13일 쿠릴열도 방문으로 러일 관계가 심각하게 악화하고 있다. 일본이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북방 4개 섬(에토로푸, 쿠나시르, 시코탄, 하보마이) 가운데 하나인 에토로푸를 푸틴 대통령이 방문한 것은 집권 이후 처음이다. 다카이치 총리가 이번 방문을 향후 러일 관계의 중단기적 회복을 어렵게 할 수 있는 중대 사안으로 언급할 정도로 그 파장이 크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러시아가 실효 지배하고 있는 북방 4개 섬은 일본에 패전과 미해결된 전후 영토 문제를 상징하는 민감한 사안이다. 일본에서는 북방영토 반환을 전후 주권 회복의 상징이자 역대 정치권이 추구해 온 주요 외교적 과제 가운데 하나로 인식해 왔다. 그동안 일본 정치권은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음에도 러시아와의 협상을 통해 영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를 유지해 왔다.

이처럼 전후 주권 회복의 상징성을 지닌 북방영토를 러시아 대통령이 전격 방문하고, 일주일 뒤인 8월 20일 핵잠수함을 포함한 대규모 군사훈련까지 실시한 것은 해당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실효 지배를 기정사실화하고 영유권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 이상의 전략적 함의를 갖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다카이치 총리의 외교적 리더십뿐만 아니라 장기 집권 구상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푸틴 대통령의 방문 이후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일본을 지지하고 중국이 러시아의 입장을 옹호하면서 국제적 파장도 확대되고 있다. 그렇다면 푸틴 대통령은 왜 지금 쿠릴열도를 방문하고 대규모 군사훈련까지 실시한 것일까? 본 보고서는 푸틴 대통령의 쿠릴열도 방문 의도와 배경을 분석하고, 일본 정치권에 미칠 파장과 러일 관계 및 향후 일본 정국에 대한 영향을 살펴본 뒤 우리 정부가 고려해야 할 전략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푸틴의 쿠릴열도 방문 배경

푸틴 대통령의 이번 쿠릴열도 방문은 한편으로 일본의 미일동맹 강화와 방위력 증강, 이른바 ‘강한 일본’ 전략에 대한 러시아의 불만을 표출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과 일본에 대화의 필요성을 환기하려는 복합적인 전략적 의도가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유럽에서 NATO의 동진을 둘러싼 갈등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어진 이후 일본과 NATO의 안보협력은 실전훈련, 방위산업 표준화, 자위관 파견, 국방장관회의 참석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다. 또한 미일 양국은 통합방공 미사일방어(IAMD) 체계 협력을 확대하고 일본 내 미사일 전력과 연합훈련을 강화하는 등 러시아 극동지역의 군사기지화 해군 작전에 대한 감시·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8월 발표한 방위백서에서도 북·중·러 간 군사협력을 동아시아 안보의 주요 위협 요인으로 평가하고, 러시아의 극동 및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군사활동과 중국과의 군사적 연대 강화를 주요 안보 우려로 제시했다.

지난 8월 키르기스스탄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외교장관 회의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일본의 재군사화와 핵무장 움직임에 강한 경계와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도 러시아의 이러한 안보 우려를 보여준다. 일본은 NATO와의 군사협력, 대러 제재 공조, 연합훈련 강화를 넘어 자위대 통합작전사령부와 주일미군사령부의 기능 및 역할 강화를 중심으로 미국 주도의 역내 통합 억제체제 구축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의 현상 변경 시도를 비판하고 방위력 증강과 독자적인 외교·안보 리더십 강화를 추진하는 다카이치 내각에 쿠릴열도 방문이라는 상징적 방식으로 대응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푸틴 대통령의 방문 일주일 만에 수상함과 핵잠수함, 연안 미사일 부대 등이 참가하는 대규모 미사일 타격훈련이 실시됐다는 점은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

물론 이번 방문은 일본 보수진영이 주요 국익이자 전후 주권 회복의 상징으로 인식해 온 북방영토 문제에 대해 러시아가 어떠한 양보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행동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이 영토 문제에 관한 상징적인 정치적 선언에 그치지 않고 대규모 군사훈련을 병행했다는 점은 이번 조치가 영유권 문제뿐 아니라 러시아가 인식하는 역내 안보 위협에 대한 불만과 경고의 성격도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 일본 내에서는 푸틴 대통령의 쿠릴열도 방문 이후 다카이치 총리의 강경한 대러 발언이 국내 여론의 지지를 얻으면서 오히려 러시아의 행동이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일본 내 대러 인식이 이미 크게 악화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반러 민족주의가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을 유의미하게 끌어올리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 양국과의 관계가 동시에 악화되고 일본의 역내 외교적 공간이 축소될 경우, 이는 외교·안보 리더십 강화를 추진해 온 다카이치 총리에게 중장기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방문에는 또 다른 정치적 함의도 존재한다. 미국과의 대화 필요성을 환기하려는 의도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협상이 교착 또는 결렬된 이후 이란 전쟁과 중동 정세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면서 유라시아와 동아시아 안보에 대한 관심과 개입 여력이 상대적으로 감소한 상황이다. 일본은 이러한 전략적 공백을 동북아시아에서 외교·안보 리더십을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지만,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서 미국과의 직접적인 협상과 거래를 추구해 온 푸틴 대통령의 전략적 계산과는 거리가 있다. 반면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황이 러시아에 불리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푸틴 대통령은 국내 여론뿐 아니라 러시아에 우호적인 국가들로부터도 휴전과 전쟁 종결에 대한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북아시아에서 미일동맹의 전략적 관심을 환기하고 미국의 관심을 다시 역내로 끌어들이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카이치 내각은 G7의 대러 제재에 적극 참여하면서도 동북아시아에서 러시아와 독자적인 에너지 협력을 지속하는 등 미일 안보 협력과 자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동시에 추구해 왔다. 이는 일본 국내에서 대러 협상론자들의 입지를 일정 부분 유지하는 기반이 되었으나, 이번 푸틴 대통령의 쿠릴열도 방문으로 러시아와의 협상에 대한 회의론이 다시 확산하면서 이들의 입지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중국과의 갈등 심화, 불안정해지는 동북아 안보 구도, 중동발 에너지 위기와 일본의 대러 에너지 의존을 고려하면 반러 민족주의와 추가적인 제재 강화만으로 대응하기는 중장기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총선 압승에도 불구하고 자민당 내부의 정치적 분열과 중·러 양국과의 동시 갈등이 지속될 경우, 내각 지지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라도 러시아와의 대화와 외교력 복원에 대한 요구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역설적으로 푸틴 대통령의 쿠릴열도 방문은 북방영토 회복을 보수적 정체성과 ‘강한 일본’, ‘보통국가’ 건설의 상징으로 강조해 온 일본 정치권에 러시아와의 대화 필요성을 다시 부각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란 전쟁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북미 대화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한편 동북아시아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안정적인 역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푸틴 대통령의 쿠릴열도 방문은 단순한 영토 문제를 넘어 미국·일본·러시아 간 전략적 상호작용을 촉진하려는 행보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일본 정치권에 미칠 파장

일본 정부는 푸틴 대통령의 쿠릴열도 방문을 단기적으로 러일 관계 회복을 사실상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심각한 외교적 도발로 인식하고 있다. 일본은 우크라이나와 이란 전쟁 등으로 에너지 안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도 일부 대러 제재의 예외를 유지하며 러시아산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에 상당 부분 의존해 왔다. 이는 일본이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외교적·경제적 이해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기 어려운 구조적 요인이다. 과거 아베 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이 점령한 북방 4개 섬의 반환 문제를 전후 패전의 상처를 극복하고 주권을 회복하는 상징적인 외교 과제로 인식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와의 경제협력과 정치적 대화를 병행하면서 북방영토 문제 해결과 평화조약 체결을 위한 양국 간 협상을 지속했다.

다카이치 총리 역시 이러한 정책적 기초를 계승해 보수 집권세력의 주요 외교적 숙원 가운데 하나로 북방영토 문제를 중시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다카이치 내각에 상당한 정치·외교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장기 집권 구상에도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유사시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중국과 갈등을 지속해 온 다카이치 총리는 이제 러시아와의 영토 문제까지 겹치면서 중·러 양국과 동시에 외교적 대치 국면에 놓이게 됐다. 그동안 한일 및 한미일 관계를 안정화하면서 중국에 대해서는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는 전략이 다카이치 총리의 실용적이고 강한 외교·안보 리더십을 부각하는 효과를 가져왔다면, 중·러 양국과의 동시 갈등은 이러한 전략의 지속 가능성을 시험하는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다.

특히 푸틴 대통령의 쿠릴열도 방문을 사전에 인지, 억제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일본 정치권의 입장에서 상당한 외교적 부담이며,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는 동북아시아 안보 구조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북방영토 반환과 평화조약 체결을 위한 협상 노력이 사실상 좌절되고 대러 영토 협상의 주도권마저 약화될 경우, 다카이치 내각은 외교적 성과 부족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여기에 안보 불안에 대한 중도층의 우려까지 확대될 경우 내각 지지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중동발 에너지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사할린-2 프로젝트’를 비롯한 일본의 러시아 내 에너지 사업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고려하면 대러 제재를 추가적으로 강화하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러시아와의 대화 채널 복원과 재협상은 향후 일본 외교에서 더욱 긴급하고 중요한 과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일본 외교의 주요 현안으로 인식되어 온 북방영토 문제와 관련해 러시아 최고지도자의 직접 방문을 억제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중장기적으로 다카이치 총리에게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다. 이는 대러 외교의 주도권 약화를 넘어 방위력 증강, 헌법 개정, 보통국가화, ‘강한 일본’ 등 보수 지지층 결집을 위해 추진해 온 주요 정치 어젠다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합의와 시사점

푸틴 대통령의 이번 쿠릴열도 방문으로 야기된 러일 갈등은 일본의 외교·안보 리더십 강화를 추진해 온 다카이치 내각에 새로운 도전 요인이다. 지속되는 중일 갈등에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까지 더해질 경우 일본의 동북아 외교 공간은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대러·대중 외교가 동시에 갈등 국면에 접어들면서 북·중·러 관계의 역학 변화 속에서 다카이치 내각의 외교적 선택지는 더욱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외교적 압박이 엔화 약세에 따른 소비자 물가 상승, 총선 압승 이후 국정운영 방식에 대한 논란, 황실전범

개정 문제 등 부정적인 국내 정치·경제 요인과 결합할 경우 내각 전체의 정치적 부담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를 고려하면 러일 갈등의 심화는 다카이치 내각에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러시아와의 대화 필요성도 높이는 이중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미일관계를 강화하면서도 독자적인 외교·안보 리더십을 추구해 온 다카이치 내각이 역내 외교적 고립 가능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한국과의 협력 필요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 한일 양국은 이러한 전략환경의 변화를 활용해 공통의 전략적 이익을 확대하고 기존의 화해와 협력을 보다 제도화된 수준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해양 안보, 감시·정찰 및 정보 공유 분야에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동해상 군사훈련이 증가하고 북러 밀착으로 동해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에 대응해 한미일 안보 협력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실효성을 높이고, 양국 해군 간 소통 채널을 강화하며, 정찰·감시 자산을 통해 획득한 정보의 공유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양국 간 군사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공동의 안보 이익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우리 정부는 이러한 단기적 안보 협력이 지속 가능한 한일 화해와 정책 공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외교·안보 대화와 함께 궁극적으로는 한일 FTA 및 경제 통합 논의로 발전할 수 있는 에너지·경제·기술 협력의 기반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본이 러시아와 추진하고 있는 사할린-2 프로젝트 등 에너지 협력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한일 간 LNG 스왑(Swap) 등 에너지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더 나아가 AI 공동 연구개발과 공급망 및 방산

협력, 아시아 시장에 특화된 민간 주도 데이터센터 구축 등 한국의 경제·기술적 강점을 외교·안보 전략과 연계해 양국 간 새로운 협력 영역을 개척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협력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양국 간 정치적 불확실성을 구체적인 경제적 성과와 제도적 협력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이는 궁극적으로 한일 간 경제통합과 지속 가능한 안보 협력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

//끝//

본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